성명

발신 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010-8495-0283>

날짜 2026.10.15.

제목 [성명] '술' 핑계로 '홈리스'를 내몰려는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 중구·용산구,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술' 핑계로 '홈리스'를 내몰려는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10월 12일, 각각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서울 중구, 용산구)'를 시행하였다. 두 자치구는 11월 8일까지 27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1월 9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폐해를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정책적 수사는 외피일 뿐,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의 본 의도는 서울역이라는 공유재를 독점해 개발이익을 전유하기 위한 사전정리 작업으로서의 홈리스 퇴거조치다.

홈리스 혐오를 제도화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지속"등을 근절하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서울역광장 건전 이용 조례)를 제정하였다. 뒤이어 중구·용산구는 2025년 6월 1일,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025년 6월 19일, 오세훈시장은 서울역광장을 찾아 '금주구역'으로도 지정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오세훈시장이 방문한 직후 서울시가 출장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의견은 '음주문제는 극히 일부'며, '금주구역 지정은 좋은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서울시 정보공개결정문). 그럼에도 두 자치구는 이번에 서울역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임에도 "노숙인"만을 "음주", "흡연" 행위자로 낙인찍고, 조례 제정으로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여 홈리스 배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홈리스의 존재를 은폐하는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과 서울시

오세훈시장과 내란정권의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3년 9월 11일,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게 ‘받들어 총’ 형상의 조형물은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통해 광화문에 들어섰다.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또한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중이다. 해당 계획은 서울역을 광화문,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상징축으로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속내는 서울역 및 일대를 주변 개발사업에 편승해 개발하려는 것이다.

2024년 5월, 서울역 북동편 봉래1지구 재개발이 완료되어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섰다. 같은해 12월에는 서울역 북쪽 약 3만㎡의 저이용 철도부지 위에 최고 39층 규모의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을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착공되었다. 올해 2월에는 서울역 맞은편 봉래3지구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지며 대형 업무시설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서울시를 필두로 한 홈리스 존재 지우기와 함께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8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고시’를 통해, 현재 서울역광장에 위치한 서울시립 거리홈리스 지원시설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도로 옮기도록 계획하였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서울역광장에 설치운영해 온 지원시설을 지하에 매립하겠다는 서울시는 “쾌적한 공간지원과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 자찬하였다(서울시보도자료).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고시’(2024.08.16.)를 통해 “서울역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광장 환경정비를 위해 기존 노숙인시설 이전” 계획을 세웠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해당 고시는 차량 진출입마저 “응급환자 등 비상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마치 전시작전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고시).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의 서울역광장 조례와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희망지원센터 지하 매립, 두 자치구의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은 서울역 일대의 개발이익을 취하기위해 홈리스의 존재를 지우려는 치밀하고도 오랜 계획이다.

가난한 이들의 휴식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오세훈시장은 2024년 12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식에서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겠다 하였다. 한편, 10월 6일, 수백명의 홈리스에게 의지처가 되었던 서울역 인근 홈리스 지원기관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서울시청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홈리스는 “가난한 이들의 휴식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손팻말에 적었다.

작년 6월 두 자치구가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일부 거리홈리스들은 흡연여부와 무관하게 단속요원들로부터 체류와 이동을 제약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구청 담당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금주구역 지정이 목적이기에 노숙인을 위한 대책 방안은 준비 중"이라 답하였다. 용산구청 담당자는 “남대문경찰서와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라 하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홈리스를 고려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보건정책의 탈을 쓴 강압적인 퇴거정책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울역광장이 혼탁하다면 공공성이 무너진 탓이다. 서울역에 필요한 건 오피스 빌딩이나 국가상징공간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을 몰아내는게 아니라 기차를 타든 말든 엉덩이 붙이고 앉을 의자를 어렵잖게 구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에 대고 신(神)을 팔아대며 고막을 괴롭히는 종교 강매를 멈추는 일이다.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증세를 겪는 홈리스가 있다면, 정신병원 입원과 같은 강제 의료개입

우선이 아닌 주거 우선을 통한 집다운 집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질환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두 자치구는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에 매몰되어 홈리스 혐오를 제도화하는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역사 및 서울역광장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10.15.

홈리스행동